

신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독일의 기업활력 제고 관련 법제 주요 내용

김성곤 | 고려대학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연구
 주제
 연구
 분야

 연구
 주제
 연구
 분야

I. 들어가며

각 국가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사업체 수의 99.9%(약 360만개), 종사자 수의 81.8%(약 1,770 만 명), 전체 매출액의 42.1%(약 510조원)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소위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s)²⁾'으로 알려진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소재한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9년 10월 1일 중소기업 발전전략(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독일 중소기업 발전전략의 배경과 지원 논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내 분야별 정책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 내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S. 11.

2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s)'은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의해 고안된 용어로서 숨은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아 눈에 띄지 않지만, 틈새시장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오른 1등 회사를 일컫는 용어이다. '히든 챔피언'을 정하는 기준은 총 3가지로, ① 매출 기준 세계 1~3위권 또는 유럽 1위 기업, ② 매출액 50억 유로(약 7조 원) 이하, ③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총 2734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있으며 이 중 47.8%가 독일 기업이다. 독일에 뒤이어 미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으로 '히든 챔피언'이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23개로 집계되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히든 챔피언' 관련 뉴스를 참고할 것, <https://news.kotra.or.kr>.

II. 독일 연방정부 '중소기업발전전략' 수립의 배경 및 목표

독일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전통이 깊은 대규모 가족회사에서부터 수공업, 자유업 및 자영업, 스타트업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히든챔피언' 기업이 발달한 국가이다. 독일은 국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직업교육의 80% 이상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일자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³⁾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다.

독일에서 중소기업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내지 기여도는 통계적 수치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중소기업들은 제세 및 공과금의 부담을 통해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중소기업들의 기여 없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자원 조달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들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사회사업 등을 통해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독일 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은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무시되기도 하며 때로는 과도한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외면당한다는 느낌이나 좌절감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⁵⁾

국내·외 시장의 경제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인구의 변화로 인해 전문인력 및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발전 등 기업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필요로 하며 경쟁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분배되고 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는 국가가 직접 경쟁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육성전략을 통해 사회·정치적인 논의 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처우를 마련하고자 한다.⁶⁾

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6.

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6.

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7.

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7.

III. 기본적인 기업환경의 개선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발전전략'의 핵심은 '기초적인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이다. 조세 및 관료주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노동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 및 혁신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⁷⁾ 이하에서는 이를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독일의 조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세제개혁을 통해 각국의 조세 경쟁력 및 경제적인 활동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세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 경쟁국들이 감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독일 정부 역시 국제적인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할 계획이다.⁸⁾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는 독일 경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 성장 및 고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⁹⁾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무증세(無增稅, keine Steuererhöhungen)'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세액총액상 한제한제도(Steuerdeckel)의 도입을 통해 인적회사의 조세부담률을 4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¹⁰⁾ 실질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영업세상의 산입 총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종국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¹¹⁾ 재산세의 재도입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기업의 승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친화적인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¹²⁾

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ff.

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4 Kernelemente für eine umfassende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S. 2 ff.

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 der Mittelstandsstrategie vom 29. August 2019, S. 4.

10 Handelsblatt, "Altmaier will Mittelstand mit Steuerdeckel stärken", 2019. 10. 1.

11 Buchta/Münch,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benennt Kernelemente einer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11. 25.

1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8.

또한 인적회사에서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특례 조항의 개선 및 제한의 완화, 법인세과세와 관련한 선택권의 도입,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영업세액공제제도의 개선, 자본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영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국외거래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국외이전세의 개정, 법인세 인하, (특히 디지털 혁신제품에 대한) 적시의 세무감사 및 감가상각 조건의 개선, 영업세 산입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된다.¹³⁾

(1) 연대특별부가세의 단계적 폐지

독일 정부는 통일 후 구 동독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부과되고 있는 연대특별부가세(Solidaritätszuschlag, 이하 연대세)¹⁴⁾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도 부분적이거나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액공제제도가 면세한도제로 대체된다.¹⁵⁾ 현재 연대세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90%가 연대세 납세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며¹⁶⁾ 그 액수는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2) 이익잉여금에 대한 특례 제도의 개선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와 세계적인 경기의 둔화 속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¹⁸⁾ 인적회사의 사내유보금은 장기간 적립을 하고 있는 때에만 통상 적용되는 세율이 아닌 우대세율이 적용되기에 오직 소수의 기업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약 250만개의 대상 기업 중 약 6000개 정도).

1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4 Kernelemente für eine umfassende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S. 2.

14 현재 연대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추가하여 5.5%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다.

1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 der Mittelstandsstrategie vom 29. August 2019, S. 4.

16 연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점은 현재의 972유로에서 16,956유로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과세 소득 61,717유로까지는 앞으로 연대세 납세의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17 Bundesregierung, "Milliardenschwere Entlastung ab 2021", 2019. 11. 29.

18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1115-altmaier-benennt-kernelemente-unternehmenssteuerreform.html>.

규모가 큰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의 자본회사와 비교해서 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 연방정부는 소위 선택제도(Optionsmodell)의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¹⁹⁾ 즉, 인적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자본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충적인 선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적회사들은 자본회사로 과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세부담을 법인세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²⁰⁾

(3) 디지털 혁신 제품에 대한 감가상각기한의 단축

독일 세무당국의 감가상각기준은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 경제 분야의 디지털화 및 Industrie 4.0의 진행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감가상각기준은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다. 특히 디지털 혁신 제품에 대한 감가상각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들이 제조시설의 디지털 현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²¹⁾

(4)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25%라는 세율은 더 이상 저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적포기세 역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소 가족기업의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외 규정의 개선, 관료적 형식주의의 완화 및 이중과세의 금지 등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할 계획이다.²²⁾

1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2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2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2.

2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5) 체납세에 대한 연체 이자율의 인하

현재의 시장의 통상 이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납세액에 대한 연체 이자율은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과세당국은 연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연 6%의 가산이자 이는 현재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율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에 이러한 가산이자의 부과를 통해 약 29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연방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체납세액에 대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법상 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할 계획이다.²⁴⁾

(6) 부가가치세 사전신고제도의 개선

법인 설립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전신고(Umsatzsteuervoranmeldung)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세법에 따라 독일 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매 분기마다 한번씩 부가가치세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액이 7,500유로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매달마다 부가가치세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매출액이 매우 적은 기업들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 의해 가중된 부담을 안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영세기업들에 대하여 이러한 보고의무를 일반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37,000 개의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⁵⁾

(7) 법인세 및 영업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독일 정부는 자본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5%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적절하게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연대세의 완전한 폐지, 자본회사의 법인세 산정에 있어서 영업세액 공제제도의 도입 및 영업세법상의 산입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과 함께 논의를 할 계획이다.²⁶⁾

2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2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2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2.

2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4 Kernelemente für eine umfassende Unternehmenssteuerreform, S. 3.

2. 사회보장분담금제도 및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1) 사회보장분담금 기여율 상한제도의 도입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인적 및 물적 시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공과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독일 연방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분담금은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전부 합하면 약 40%에 달한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24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 부담금기여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²⁷⁾ 독일 정부는 「연방 기본법」에 사용자 및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장분담금의 기여율을 40% 이하로 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계획이다.²⁸⁾

(2) 실업보험 부담금의 인하

독일 정부는 실업보험의 높은 적립금을 (보험부담금 기여율의 추가적 완화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²⁹⁾ 2019년 1월 1일에 실업보험 부담금을 2.5%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³⁰⁾의 적립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에 대한 부담금을 2.2%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재원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적립금의 규모를 적당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³¹⁾ 2020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는 2.4%로 인하되었고,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³²⁾

2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9.

28 Die Zeit, "Altmaier will Sozialabgaben bei 40 Prozent deckeln", 2019. 10. 1.

29 Bundesregierung, "Beitrag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sinkt", 2019. 11. 18.

30 뉘른베르크에 소재한 독일 연방 노동부 산하의 연방기관으로 독일고용보험을 관할하는 행정주체이다.

3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0.

32 Bundesregierung, "Beitrag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sinkt", 2019. 11. 18.

3. 탈 관료주의

중소기업들은 관청의 불필요한 형식주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관료주의적인 부담의 경감은 연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1) 형식적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

2019년 9월 18일 형식적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법률 제3차 개정안(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이하 BEG III)³³⁾이 연방 내각을 통과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형식적 관료주의로 인한 부담을 줄여 경제생태계를 더욱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한다.

BEG III의 핵심은 조세법 분야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의 탈피 및 디지털화에 따른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이다. 이 법에는 특히 세무관련 증빙서류의 전자적인 저장방식의 개선, 전자적인 근로무능력증명서 제도의 도입 및 호텔업계에서 통용되는 서면형식의 숙박명부제도에 대한 전자적인 개선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일상 경제활동에서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되며 그 액수는 약 1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⁴⁾

또한 상법 및 조세법 분야의 문서보관 기한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전자적인 방식의 통일적인 근로무능력증명서 제도의 도입하는 것 만으로도 기업들은 1년에 수십억 유로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력사업에 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며 투자에 있어서도 보다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³⁵⁾

3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Eckpunktepapier vom Mai 2019.

3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0.

3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1.

(2) 상법 및 조세법 분야의 형식적 관료주의 철폐

관료주의적인 부담 중에서 세무 행정에서의 형식적 서면주의로 인한 부담이 전체에서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세법 제147조(§ 147 AO)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세법에 따른 서류의 보존 기한은 세무감사와 관련하여 규정된 보존기한보다 더 길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러한 서류의 보관에 따르는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상법 및 조세법상의 서류 보존기한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서류 보존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많은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³⁶⁾

(3) 기타의 개선사항들

많은 중소기업들은 유럽연합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관료주의적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독일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차원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첫 단계로 독일 내에서 기업 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요건이 기업 내 종업원 수 50인 이상으로 상향된다.³⁷⁾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관료주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공무출장에 대하여는 소위, A1 증명서(A1-Bescheinigung)³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각종 신청서 및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복잡하지 않은 방식을 필요로 한다. 2022년까지 모든 공공행정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들이 통일적인 사용자 계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소위 '일회제출(once-only-Prinzip)' 원칙).³⁹⁾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36)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는 약 2억 유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1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2).

37) Dubsy, "Altmaier will Datenschutzbeauftragte erst ab 50 Mitarbeitern", crn, 2019. 9. 2.

38) KPMG, "A1-Bescheinigung bei Dienstreisen", 2019. 11. 4.

39) Wikipedia, "Once-Only-Prinzip".

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이 유럽법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모든 입법계획에 적용되어야 하는 ‘작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라(Think Small First)’원칙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유럽연합차원에서 소위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⁴⁰⁾

4.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소기업들은 수시로 변하는 주문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융통성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 등)는 새로이 검토할 계획이다.⁴¹⁾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제정비의 내용으로는 미니잡(Minijob) 관련 제도의 개선, 노동시간의 유연화,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책임 규정의 개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서류작성의무⁴²⁾의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동자 보호 및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1) 미니잡 관련 제도의 개선

미니잡이란 독일에서 2003년에 도입이 된 제도로서 통상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가 법정최저임금 이하이거나 초단기로 고용되는 형태를 말한다. 도입 당시에는 월소득 400유로 이하인 초 저임금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의미하였으나 2013년에 월 소득 최고한도가 450유로로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⁴³⁾

이에 반하여 2015년에 새로이 도입된 보통의 법정 최저임금은 원래 8.50 유로에서 9.19유로로 다시 2020년 1월 1일부터는 9.35유로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미니잡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근로 시간은

4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uropäische Mittelstandspolitik".

41 Arbeitgeber, "Koalitionsvertrag sieht Einschränkungen bei der Befrist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vor".

42 Verordnung zu den Dokumentationspflichten nach den §§16 und 17 des Mindestlohngesetzes und den §§18 und 19 des Arbeitnehmer-Entsendegesetzes in Bezug auf bestimmte Arbeitnehmergruppen.

4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6.

점점 더 줄어 들었으며 임금인상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⁴⁴⁾

독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니잡⁴⁵⁾ 일자리의 월 소득 하한선인 450유로를 일반적인 임금 상승의 추세에 맞게 조절하고자 한다.⁴⁶⁾ 즉, 월 소득한도를 500유로로 인상하여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월 55 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일반적인 최저임금 추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70만명에 해당하는 미니잡 종사자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⁴⁷⁾

(2) 노동법 관련 규정의 개정

1일 최대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법」은 현대의 디지털 작업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사용자 및 노동자들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한다.⁴⁸⁾ 따라서 「노동시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에 있어서는 유럽법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이용할 것이다. '1일'이라는 개념 대신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들은 단체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다.⁴⁹⁾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은 탄력적인 고용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간제 근로행태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⁵⁰⁾

(3) 하청업자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발주자의 보증책임의 개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물품의 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한 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전체 하청업자들의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지급책임을 진다. 즉,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청업

4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6.

45 Bundesagentur für Arbeit, "Minijob".

46 김인건, "최저임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독일 언론'", 시사IN, 2019. 2. 18.

4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6 f.

4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2.

4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2.

5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2.

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⁵¹⁾

이러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있어서의 발주자 책임⁵²⁾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불법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 및 파견근로업체에서 파견이 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임인의 책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⁵³⁾

5.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1) 고속통신망의 구축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도로, 철도 및 항공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잘 갖춰진 고속 데이터 통신망 및 이동통신 서비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국내 어디서든 디지털화에 따르는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한다.⁵⁴⁾

보다 나은 투자환경의 조성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특히 상공업 지구에 대한) 등을 통해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가비트 통신망을 확장하는 사업을 202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⁵⁵⁾ 또한 LTE 무선이동통신을 독일 전역으로 확대하여 5G 분야에서 독일을 선도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무선이동통신종합전략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⁵⁶⁾

5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6.

52 Handelskammer Hamburg, "Auftraggeberhaftung nach dem Mindestlohnsgesetz".

5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S. 6.

5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3.

55 이에 대한 상세는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gitale Strategie 2025 vom März 2016, S. 13 ff.

56 이에 대한 상세는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igitalisierung gestalten: Umsetzungs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8. überarbeitete Auflage, Juni 2020, S. 48 ff.

(2) 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또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독일 및 유럽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⁵⁷⁾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클라우드 솔루션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 및 경쟁 우위를 통한 이익을 누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상업성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⁸⁾

6. 에너지 및 기후정책

국민경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격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탄소배출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많은 비용을 전력 수급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⁵⁹⁾ 연방정부는 입법이나 정책 입안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⁶⁰⁾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분담금(EEG-Umlage) 및 네트워크 이용료, 재분담금 및 공과금 등은 단계적으로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입(Bepreisungseinnahme)에서 지출되도록 할 계획이다.⁶¹⁾

이 외에도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에 대한 세제지원 내지 세액공제제도⁶²⁾를 통해 기후보호에 실질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여하며 동시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⁶³⁾

5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GAIA-X".

5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3.

59 Harbauer, "Mittelstand braucht sicher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020. 6. 18.

60 Umweltbundesamt, CO₂-Bepreisung in Deutschland, 2019. 8. 29.

6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4.

62 Bundesfinanzministerium, "Kurz erklärt: Steuerliche Förderung energetischer Gebäudesanierungen", 2020. 2. 7.

63 이에 대한 상세는 다음을 참고 할 것,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5 ff.

7. 중소기업 자금조달

중소기업들은 언제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충분한 자금조달을 받기를 원한다. 중소기업들은 민간은행, 공공금융기관 및 협동조합 내지 저축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독일재건은행 중소기업지원사업부⁶⁴⁾ 및 보증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⁶⁵⁾ 바젤협약(Basel IV)이 시행이 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엄격한 조건을 요하는 은행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대신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⁶⁶⁾

독일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정부는 회사 설립 자금의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들(예를 들면, High-Tech-Gründerfonds,⁶⁷⁾ EXIST⁶⁸⁾ 및 INVEST⁶⁹⁾)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독일 재건은행의 100% 자회사인 'KfW Capital'⁷⁰⁾를 통해 성장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⁷¹⁾

64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Unser Förderangebot für den Mittelstand".

6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5.

6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5.

67 <https://www.htgf.de/de/>.

68 <https://www.exist.de/DE/Home/inhalt.html>.

69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invest.html>.

70 <https://kfw-capital.de/>.

7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5.

IV. 전문인력 채용, 교육 및 훈련

독일 내 10개 중 6개 이상의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심하다.⁷²⁾ 독일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며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1. 해외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의 개선

독일은 국내 전문인력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에 해외의 많은 전문인력 역시 필요로 한다. 독일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국제적인 전문인력들에게 독일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위한 「전문인력 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⁷³⁾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의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을 갖춘 숙련공들도 독일 노동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⁴⁾

그러나 외국의 전문인력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개선된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민간부문과 함께 주요 대상을 정하고 적합한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간소한 비자요건 및 절차,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 또는 국내외에서의 공용어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⁷⁵⁾ 또한 해외 전문 인력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1개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소위 '단일창구화(One-Stop-Shop)').⁷⁶⁾

7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7.

73) Wikipedia,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7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7.

7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7.

76) Wikipedia, "One-Stop-Shop".

2. 국내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

독일 정부는 또한 국내 잠재적인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⁷⁷⁾ 최대한도에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화에 맞게 「직업 능력개발훈련규칙(Aus- und Fortbildungsordnungen)」⁷⁸⁾을 개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의 이중 직업훈련 시스템의 매력도를 높이고 대학 교육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원적 직업훈련시스템의 혁신역량, 효율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공업 부문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2개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마이스터 강제주의(Meisterpflicht)로의 회귀를 준비하고 있다.⁷⁹⁾

인구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수익 역시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직업생활에서 연금생활로 보다 잘 전환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⁸⁰⁾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창업지원 프로젝트(Gründungsoffensive)⁸¹⁾를 통해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창업을 통한 자립을 기회로서 실현할 수 있다.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커다란 당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와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승계-실무경험을 통해 얻은 실무(Unternehmensnachfolge – aus der Praxis für die Praxis)'⁸²⁾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7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Fachkräfte für Deutschland".

78 Forsch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Digitalisierung und Nachhaltigkeit künftig Pflichtprogramm für Auszubildende", 2020. 4. 30.

79 Bundesregierung, "Wiedereinführung der Meisterpflicht".

8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8.

8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e Gründungsoffensive".

8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Ungeklärte Nachfolgesituationen in KMU können wir uns nicht leisten", 2019. 8. 30.

V.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및 디지털화 지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또는 생명공학과 같은 융합기술 내지 파괴적 혁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및 이에 걸맞은 조직적인 노하우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 오로지 혁신과 점진적인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중소기업들은 장래에도 생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 여건 및 기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⁸³⁾ 이를 통해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의 비율을 회복시키고⁸⁴⁾ 2025년에는 4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⁸⁵⁾

1. 중소기업 연구지원제도의 도입

연방정부는 연구지원제도를 통해 독일의 경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및 혁신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보다 더 많은 연구 및 개발을 통한 혁신과 이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0년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대한 보충적 법률의 입법을 통해 민간 경제분야에서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는 소위 재정상의 연구지원제도(steuerliche Forschungsförderung)⁸⁶⁾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외에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인건비 외에 수당을 추가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지원 자금의 규모는 2021년에 약 11억 5천만 유로에 달하며 매년 인상되어 2024년에는 약 13억 4천만 유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⁸⁷⁾ 또한 위탁연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위탁자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8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9 ff.

84 BASECAMP, "Strategie für Innovationsförderung im Mittelstand", 2019. 9. 6.

85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Innovationsbericht Mittelstand 2019: Innovatorenquote sinkt auf 19%", 2020.

8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Neue Forschungszulage in Deutschland", 2020. 1. 22.

8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0.

2.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독일 정부는 연방 전역에 걸쳐 26개로 구성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⁸⁸⁾를 통해 중소기업 및 수공업자들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역량센터를 통해 기업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며 다른 기업들이 연구한 지식 및 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⁸⁹⁾ 또한 역량센터를 통해 연방차원의 인공지능 트레이너(KI-Trainer)⁹⁰⁾ 네트워크와 같은 인공지능 분야의 특별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 및 노하우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진출한 지 2년 이하의 기업 설립자 및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은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약칭 ERP)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기업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을⁹¹⁾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술에 능통한 기업들은 디지털화 내지 혁신의 초기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⁹²⁾

3. 기술혁신 지원청의 설치

연방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와해적 혁신 기술들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청(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⁹³⁾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디지털혁신 촉진 프로젝트인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Digital Hub Initiative)⁹⁴⁾의 일환으로 디지털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이 미 기반을 갖춘 중소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8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unterstützen vor Ort".

8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0.

90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Benötigen Sie Unterstützung auf dem Gebie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9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RP-Digitalisierungs- und Innovationskredit".

9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2.

93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

9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gital Hub Initiative".

4.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

독일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으로 그 핵심에는 올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발족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 이전 프로젝트인 'Transferinitiative'⁹⁵⁾가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의 결과물을 미래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 연방정부의 혁신정책 이념인 '아이디어에서 시장에서의 성공까지(Von der Idee zum Markterfolg)⁹⁶⁾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모든 단계에서의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⁹⁷⁾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프로젝트(Zentrales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⁹⁸⁾를 통해 각 개별적인 혁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1954년부터 연방경제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연구 프로젝트인 'Industrielle Gemeinschaftsforschung(IGF)⁹⁹⁾는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기관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등과 같은비기술적인 혁신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발전전략'에는 자영업자,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¹⁰⁰⁾ 특히 올해 도입되는 비즈니스 모델 및 선도적인 솔루션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Innovationsprogramms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 IGP)¹⁰¹⁾은 비기술적인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과 창의산업이 그 주요 지원 대상이다.¹⁰²⁾

9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Transferinitiative: Die Rolle von Normung und Standardisierung für den Technologietransfer".

9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Von der Idee zum Markterfolg: Programme für einen innovativen Mittelstand", 2019. 2. 28.

9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9.

9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Über ZIM".

99 Bundesregierung, "Industrielle Gemeinschaftsforschung(IGF)".

100 Oberfränkische Wirtschaft, "Pilotförderung Innovationsprogramm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IGP)".

10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Innovationsprogramm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

10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19.

5. 리빙랩 프로젝트

독일 정부는 '리빙랩 프로젝트(Reallabore-Initiative)¹⁰³⁾를 통해 법령에 있어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임시 허가규정들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독일 내에서 실증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리빙랩 네트워크 내에서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정보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리빙랩 핸드북을 통해 실용적인 정보 및 모범사례들을 제공한다.¹⁰⁴⁾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가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입상을 한 아이디어들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6. 디지털 에이전시(Digitalagentur)

독일 정부는 모든 분야 및 전 지역에서 네트워킹 및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광대역 통신망을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통합하고, 디지털 정책의 구현을 지원하며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방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조직(Digitalagentur)을 만들 계획이다.¹⁰⁵⁾

7. 중소기업 친화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쟁법 개정을 위한 법률(GWB-Digitalisierungsgesetz)¹⁰⁶⁾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디지털 기업 및 플랫폼 회사들과의 경쟁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할 때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10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Reallabore-Testräume für Innovation und Regulierung".

10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2.

105 이에 대한 상세는 다음을 참조할 것,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gitale Strategie 2025, S. 55 ff.

10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GWB-Digitalisierungsgesetz".

8. 품질 인프라 및 표준화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표준제도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사회에서의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 역시 국가품질인프라를 강화하고 혁신 내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품질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따른 이점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¹⁰⁷⁾

특히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디지털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ICT 표준의 도입이 필요하다.¹⁰⁸⁾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한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몇몇 대기업들이 향유하고 있는 플랫폼 및 디지털 기술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약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¹⁰⁹⁾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선도하게 되며 이러한 표준들은 국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생의 혁신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이러한 표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¹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들도 국내, 유럽 및 국제적인 표준화에¹¹¹⁾ 손쉽게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수공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표준 절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35,000유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¹¹²⁾

10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2.

10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2.

10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2.

11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Wir unterstützen Normungsarbeit von KMU jetzt finanziell", 2020. 1. 3.

11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Normen und Standards".

11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Wir unterstützen Normungsarbeit von KMU jetzt finanziell", 2020. 1. 3.

VI.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국이 동등한 생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강한 중소기업을 필요로 한다.

1. 지역 경제구조 개선 프로젝트

독일에서는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계획(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약칭 GRW)¹¹³⁾에 따라 2020년 1월에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독일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혁신의 촉진, 디지털화, 전문인력의 개발 또는 지역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방 전역에 걸쳐 제공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자금지원조건을 포함하고 있다.¹¹⁴⁾

2. 광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인프라 구축

독일 전역에 효율적인 광대역 통신망 및 무선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바로 이러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들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¹¹⁵⁾

113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Regionale Wirtschaftsstrukturen verbessern".

114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3.

11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3.

3. 석탄산업지역 경제구조의 고도화 계획

독일 정부는 석탄산업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탄산업 지역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법률 (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¹¹⁶⁾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석탄산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공적인 산업구조의 개편 및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재한 입지의 조성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투자에 대하여는 140억 유로까지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석탄산업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석탄 산업지역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예를 들면 인프라 확대, 연구기관 및 연방기구의 유치 등)에 대하여는 260억 유로까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바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석탄산업지역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¹¹⁷⁾

VII. 국내외 새로운 시장의 개척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지원을 한다.¹¹⁸⁾

1. ‘국가산업전략 2030’

‘국가 산업전략 2030(Nationale Industriestrategie 2030)’¹¹⁹⁾의 목표는 독일 산업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핵심 기술의 개발 및 기술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116 Bundesregierung, "Von der Kohle hin zur Zukunft".

11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3.

118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as Markterschließungsprogramm".

119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ade in Germany: Die Industriestrategie 2030".

상호 협조하여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체계의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의 신속한 연구결과의 이전 및 혁신에 대한 기술 개방적인 지원 등도 포함된다.¹²⁰⁾

2.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할 때에는 공개된,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 정부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통일적인 자금조달 기준을 정립하고 유럽의 기업들이 제3국의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¹²¹⁾

3. 해외무역 촉진

또한 유럽연합이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며, 새로운 이슈들(예를 들면 전자거래)에 대한 유럽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일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 보다 더 투명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와의 -즉, 일본, 남미공동시장, 싱가포르 및 베트남- 야심적인 무역 및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무역특례협정을 실질적으로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의 이용률을 중기적으로는 적어도 85%에 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무역촉진을 위한 기관 및 제도들을 새로운 도전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이다. 소규모 무역에 대하여는 해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방법을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적합한 전략적인 해외 프로젝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120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Von der Forschung in die Praxis-Transfer und Trends im Zentralen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

121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5.

4.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구축

정부는 앞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크 아프리카(Wirtschaftsnetzwerk Afrika)¹²²⁾를 통해 독일 기업들이 기회
의 대륙인 아프리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다. 이
러한 조치에는 해외 상공회의소 및 독일 무역투자회사의 현지지사 설치(AHK¹²³⁾-/GTAI¹²⁴⁾-Präsenz), 시장개
척 프로그램과 국제무역박람회 프로그램 및 대상지역 및 기업 동반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¹²⁵⁾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지난 2012년 소위 'German Accelerator' 를 발족하여 자국의 스타트업 및 신
생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에 지사를 설립해 오고 있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스
타트업 기업들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조사, 시장 진입과정에서의 컨설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워크샵에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다.¹²⁶⁾ 또한 맞춤형 멘토링, 잠재적 고객과의 네트워크, 무상의 사무공간, 시장진출전략,
진출 희망국의 법제, 리더십 역량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현
재 2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German Accelerator' 를 아시아 지역에서 확대할 계획이다.¹²⁷⁾

V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의 육성을 연방정부의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 전략에는 단기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122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Wirtschaftsnetzwerk Afrika".

123 Deutsche Auslandshandelskammern(AHK).

124 Germany Trade & Invest(GTAI).

125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6.

126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6.

127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S. 23.

‘중소기업발전전략’을 통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외 기업간의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규제의 틀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미래에도 존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투자는 미래의 일자리와 물질적 풍요를 약속한다.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인적 및 물적 시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민첩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은 제각각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제의 정비를 통해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건, “최저임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독일 언론’”, 시사IN, 2019. 2. 1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4>, (검색일: 2020. 7. 23).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9.
- Arbeitgeber, “Koalitionsvertrag sieht Einschränkungen bei der Befrist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vor”, <https://www.agv-bw.de/arbeit-und-soziales/arbeitsrecht/sachgrundlose-befristung>, (검색일: 2020. 7. 23).
- BASECAMP, “Strategie für Innovationsförderung im Mittelstand”, 2019. 9. 6., <https://www.basecamp.digital/bmwi-strategie-fuer-innovationsfoerderung-im-mittelstand/>, (검색일: 2020. 7. 23).
- Buchta, Arell/Münch, Sören,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benennt Kernelemente einer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11. 25., <https://www.eureos.de/bundeswirtschaftsministerium-benennt-kernelemente-einer-unternehmenssteuerreform/>, (검색일: 2020. 7. 23).
- Bundesagentur für Arbeit, “Minijob”, <https://www.arbeitsagentur.de/lexikon/minijob>, (검색일: 2020. 7. 23).
- Bundesfinanzministerium, “Kurz erklärt: Steuerliche Förderung energetischer Gebäudesanierungen”, 2020. 2. 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Klimaschutz/2020-02-07-steuerliche-foerderung-energetischer-gebaeudesanierungen.html#:~:text=Wie%20hoch%20ist%20die%20F%C3%B6rderung,50%25%20der%20anfallenden%20Kosten%20abzugsf%C3%A4hig>, (검색일: 2020. 7. 23).
- 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Agentur für Sprunginnovationen”, <https://www.bmbf.de/de/agentur-fuer-sprunginnovationen-9677.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regierung, “Milliardenschwere Entlastung ab 2021”, 2019. 11. 2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lidaritaetszuschlag-1662388>, (검색일: 2020. 7. 23).
- Bundesregierung, “Wiedereinführung der Meisterpflich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meisterpflicht-ist-zurueck-1679834>, (검색일: 2020. 7. 23).
- Bundesregierung, “Industrielle Gemeinschaftsforschung (IFG)”, <https://www.foerderinfo.bund.de/de/igf-830.php>, (검색일: 2020. 7. 23).

참고문헌

- Bundesregierung, "Von der Kohle hin zur Zukunf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ohleregionen-foerderung-1664496>, (검색일: 2020. 7. 23).
- Bundesregierung, "Beitrag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sinkt", 2019. 11. 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beitrag-av-1693634>,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sstrategie vom 1. Oktober 2019.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 der Mittelstandsstrategie vom 29. August 2019.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4 Kernelemente für eine umfassende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https://www.bmwi.de/Redaktion/DE/Downloads/0-9/4-kernelemente-fuer-eine-umfassende-unternehmenssteuerreform.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benennt vier Kernelemente einer Unternehmenssteuerreform", 2019. 11. 15.,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1115-altmaier-benennt-kernelemente-unternehmenssteuerreform.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ckpunktepapier z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Prioritäten) vom Mai 2019.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III: Eckpunktepapier vom Mai 2019, (<https://rsw.beck.de/cms/main?docid=418076>,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uropäische Mittelstandspolitik", [https://www.bmwi.de/Redaktion/DE/Textsammlungen/Mittelstand/europaeische-mittelstandspolitik.html#:~:text=Mit%20der%20Mitteilung%20zum%20%22Small,Unternehmen%20\(KMU\)%22%20gelten](https://www.bmwi.de/Redaktion/DE/Textsammlungen/Mittelstand/europaeische-mittelstandspolitik.html#:~:text=Mit%20der%20Mitteilung%20zum%20%22Small,Unternehmen%20(KMU)%22%20gelten),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GAIA-X",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gaia-x.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Fachkräfte für Deutschland",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fachkraeftesicherung.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Ungeklärte Nachfolgesituationen in KMU können wir uns nicht leisten", 2019. 8. 30.,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0830-altmaier-ungeklaerte-nachfolgesituationen-in-kmu-koennen-wir-uns-nicht-leisten.html>, (검색일: 2020. 7. 23).

참고문헌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e Gründungsoffensive”, <https://www.existenzgruender.de/SharedDocs/Videos/DE/Die-Gruendungsoffensive.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Neue Forschungszulage in Deutschland”, 2020. 1. 22., <https://www.bmwi.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0/02/kapitel-1-10-neue-forschungszulage-in-deutschland.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unterstützen vor Ort”, <https://www.mittelstand-digital.de/MD/Redaktion/DE/Artikel/Mittelstand-4-0/mittelstand-40-kompetenzzentren.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ERP-Digitalisierungs- und Innovationskredit”,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Mittelstand/erp-digitalisierungs-und-innovationskredit.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gital Hub Initiative”, <https://www.clusterplattform.de/CLUSTER/Navigation/DE/Service/Unterstuetzungsangebote/Digital-Hub-Initiative/digital-hub-initiative.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Transferinitiative: Die Rolle von Normung und Standardisierung für den Technologietransfer”, <https://www.bmwi.de/Redaktion/DE/Veranstaltungsarchiv/20200117-transferinitiative.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Von der Idee zum Markterfolg: Programme für einen innovativen Mittelstand”, 2019. 2. 28., <https://www.bmwi.de/Redaktion/DE/Publikationen/Technologie/von-der-idee-zum-markterfolg-innovationsprogramme-fuer-den-mittelstand.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Über ZIM”, <https://www.zim.de/ZIM/Redaktion/DE/Artikel/ueber-zim.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Innovationsprogramm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Innovation/igp.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Reallabore – Testräume für Innovation und Regulierung”,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reallabore-testraeume-fuer-innovation-und-regulierung.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GWB-Digitalisierungsgesetz”, <https://www.bmwi.de/Redaktion/>

참고문헌

DE/Downloads/G/gwb-digitalisierungsgesetz-zusammenfassung.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Altmaier: Wir unterstützen Normungsarbeit von KMU jetzt finanziell", 2020. 1. 3.,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20200103-altmaier-wir-unterstuetzen-normungsarbeit-von-kmu-jetzt-finanziell.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Normen und Standards",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Technologie/normen-und-standards.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Regionale Wirtschaftsstrukturen verbessern",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regionalpolitik.html#:~:text=Das%20zentrale%20Instrument%20der%20nationalen,konzentriert%20sich%20auf%20strukturschwache%20Regionen>,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as Markterschließungsprogramm",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Aussenwirtschaft/markterschliessungsprogramm.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Made in Germany: Die Industriestrategie 2030",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industriestrategie-2030.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Von der Forschung in die Praxis – Transfer und Trends im Zentralen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ZIM)", <https://www.bmwi.de/Redaktion/DE/Meldung/2018/20181108-transfer-und-trends-im-zim.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Wirtschaftsnetzwerk Afrika",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Aussenwirtschaft/wirtschaftsnetzwerk-afrika.html>, (검색일: 2020. 7. 23).
- Bundeswirtschaftsministerium, Digitale Strategie 2025 vom März 2016.
- Die Zeit, "Altmaier will Sozialabgaben bei 40 Prozent deckeln", 2019. 10. 1., <https://www.zeit.de/news/2019-10/01/altmaier-will-sozialabgaben-bei-40-prozent-deckeln>, (검색일: 2020. 7. 23).
- Dubsy, "Altmaier will Datenschutzbeauftragte erst ab 50 Mitarbeitern", crn, 2019. 9. 2., <https://www.crn.de/security/altmaier-will-datenschutzbeauftragte-erst-ab-50-mitarbeitern.120725.html>, (검색일: 2020. 7. 23).
- Forsch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Digitalisierung und Nachhaltigkeit künftig Pflichtprogramm für Auszubildende", 2020. 4. 30., <https://www.fona.de/de/digitalisierung-und-nachhaltigkeit-kuenftig-pflichtprogramm-fuer-auszubildende>, (검색일: 2020. 7. 23).

참고문헌

- Handelsblatt, "Altmaier will Mittelstand mit Steuerdeckel stärken", 2019. 10. 1.,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neue-strategie-fuer-mittelstand-altmaier-will-mittelstand-mit-steuerdeckel-staerken/25073802.html?ticket=ST-7190159-abeY3RgTAnNC5jXcqXNy-ap4>, (검색일: 2020. 7. 23).
- Handelskammer Hamburg, "Auftraggeberhaftung nach dem Mindestlohngesetz", https://www.hk24.de/produktmarken/beratung-service/recht_und_steuern/wirtschaftsrecht/arbeitsrecht/auftraggeberhaftung-mindestlohngesetz/1156956, (검색일: 2020. 7. 23).
- Harbauer, Kilian, "Mittelstand braucht sichere und bezahlbare Energieversorgung", 2020. 6. 18., <https://www.bvmw.de/news/6071/mittelstand-braucht-sichere-und-bezahlbare-energieversorgung/>, (검색일: 2020. 7. 23).
- KPMG, "A1-Bescheinigung bei Dienstreisen", 2019. 11. 4., <https://home.kpmg/de/de/home/themen/2018/08/a1-bescheinigungen-bei-entsendungen-und-dienstreisen.html>, (검색일: 2020. 7. 23).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Unser Förderangebot für den Mittelstand", <https://www.kfw.de/inlandsfoerderung/Unternehmen/index-2.html>, (검색일: 2020. 7. 23).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Innovationsbericht Mittelstand 2019: Innovatorenquote sinkt auf 19%", 2020, <https://www.kfw.de/PDF/Download-Center/Konzernthemen/Research/PDF-Dokumente-Innovationsbericht/KfW-Innovationsbericht-Mittelstand-2019.pdf>, (검색일: 2020. 7. 23).
- 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Benötigen Sie Unterstützung auf dem Gebie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https://kompetenzzentrum-kaiserslautern.digital/ki-trainer/>, (검색일: 2020. 7. 23).
- Oberfränkische Wirtschaft, "Pilotförderung Innovationsprogramm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IGP)", <https://www.owi-magazin.de/pilotfoerderung-innovationsprogramm-fuer-geschaeftsmodelle-und-pionierloesungen-igp/>, (검색일: 2020. 7. 23).
-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Digitalisierung gestalten: Umsetzungs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8. überarbeitete Auflage, Juni 2020.
- Umweltbundesamt, CO2-Bepreisung in Deutschland, 2019. 8. 29., https://www.umweltbundesamt.de/sites/default/files/medien/376/publikationen/factsheet_co2-bepreisung_in-deutschland_2019_08_29.pdf, (검색일: 2020. 7. 23).

참고문헌

- Wikipedia, "Once-Only-Prinzip", <https://de.wikipedia.org/wiki/Once-Only-Prinzip>, (검색일: 2020. 7. 23).
- Wikipedia,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https://de.wikipedia.org/wiki/Fachkr%C3%A4fteeinwanderungsgesetz>, (검색일: 2020. 7. 23).
- Wikipedia, "One-Stop-Shop", <https://de.wikipedia.org/wiki/One-Stop-Shop>, (검색일: 2020. 7. 23).
- EXIST-Projekte: <https://www.exist.de/DE/Home/inhalt.html>.
- Deutsche Auslandshandelskammern: <https://www.ahk.de/>.
- Germany Trade & Invest: <https://www.gtai.de/gtai-en>.
- High-Tech Gründerfonds: <https://www.htgf.de/de/>.
- INVEST: <https://www.bmwi.de/Redaktion/DE/Dossier/invest.html>.
- KfW Capital: <https://kfw-capital.de/>.